

## 제176호 (2008. 10. 13)

---

### ■ 경제 동향

·“9월 CBI, 6개월 연속 50선에서 횡보세 보여”

### ■ 정책·경영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건설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 시급하다”

·“장기계속공사, 1건의 단일 계약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 ■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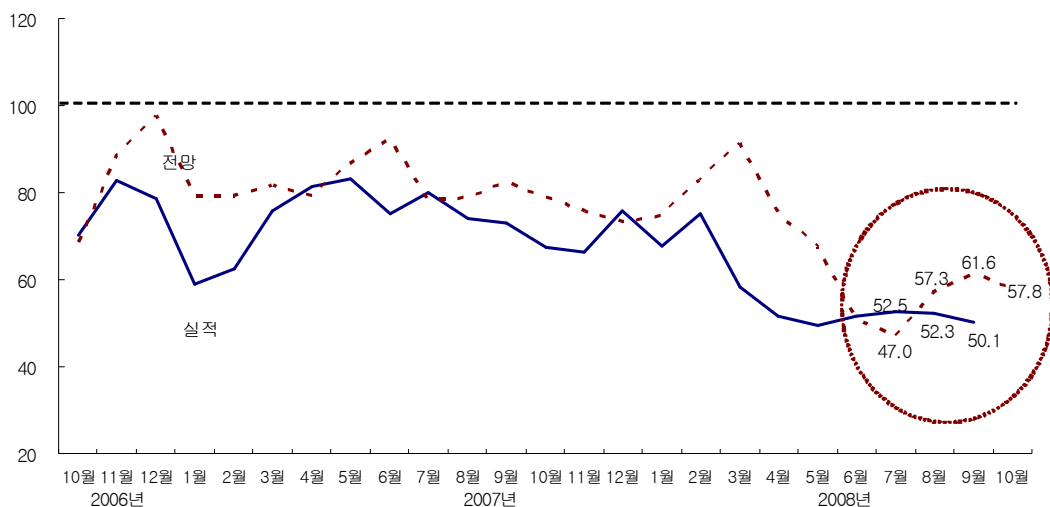
### ■ 건설 논단 : 「토건국가론」을 넘어서

## “9월 CBSI, 6개월 연속 50선에서 횡보세 보여”

-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사상 최악 수준 지속 -

-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소폭(2.2p) 감소한 50.1을 기록하여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5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임으로써 건설업 체감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사상 최악 수준의 침체 상황을 이어감.
-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수 하락폭이 매우 컸음(25.7p 하락)을 감안할 때 통상 6월 이후에는 경기변동 주기상 통계적 반등이 시현되는 것이 정상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후 3개월 동안 지난 5월의 49.3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50선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였으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 통상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9월에도 지수가 소폭 하락, 50선 초반에 머뭇.
- 지수가 최저 수준인 50선 주위에서 6개월 연속 횡보세를 보인 것은 CBSI 조사 이래 처음(2004년 7~11월 간 5개월 연속 50선 주위 횡보세 기록)으로 건설업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 수준의 침체 상황을 이어가고 있음.
- 이에는 미분양 아파트, 특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 국내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수요 침체 지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업체가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6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통계적 반등을 시현한 중견, 중소기업체는 9월 지수가 하락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시 악화됨.
- 대형 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했지만, 지수 자체는 70선에 못미쳐 체감 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임.
- 중견, 중소기업체는 지난 6월 사상 최저 수준(중견 34.5, 중소 26.5)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통계적 반등(15.5p, 11.6p 상승)을 시현했지만, 9월 들어 전월 대비 각각 5.6p, 1.0p 하락한 44.4, 37.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시 악화됨.
- 공사물량지수 역시 전월 대비 4.6p 하락한 58.9를 기록했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주택,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토목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20.4p)으로 하락해 지수 하락을 주도함.
- 주택 경기 및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월에 3.1p, 3.0p씩 하락한 주택, 비주택 물량지수는 9월에도 각각 1.1p, 3.5p 하락한 50.5, 62.0을 기록해 침체 수준이 더욱 심화됨.
- 지난 8월 상반기 지연됐던 발주의 정상화로 전월대비 8.5p 상승한 71.3을 기록했던 토목물량지수는 상승 한 달만에 다시 20.4p가 하락한 50.9를 기록하여 9월 발주가 건설업체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고, 자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인상된 자재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 관련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지수가 95.2를 기록하여 인력 수급 상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반기 50선을 넘지 못했던 자재수급지수도 전월 29.9p 상승에 이어 9월에도 3.7p가 상승한 84.2를 기록함으로써 상반기 악화되었던 자재 수급 상황이 안정을 찾음.
- 그러나, 자재비 지수는 전월 대비 8.2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65.2에 불과해 그동안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급도 전월 2.4p, 17.7p 하락에 이어 9월에도 전월 대비 각각 6.9p, 4.6p 하락한 60.3, 60.8을 기록,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 “실수요자 주택 구입 능력 제고 위해 DTI 규제 완화 필요”

- 건산연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발표 -

### ■ 정부 출범 후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 과정

- 출범 6개월을 넘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한 공급 확보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을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거나 반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주저한 측면이 적지 않아 규제 완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초래하였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국내외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8월9월에는 정부도 문제 의식을 갖고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거래 심리의 회복과 부동산시장의 제 기능 찾기에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 것임.

### ■ 부동산대책별 평가

- 6.11 대책은 실제 지방주택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 심리를 되돌리고 주택시장의 활기를 찾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8.21 대책은 중장기 주택 공급의 원활화 기반을 강화하고 주택 수요의 진작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미분양 적체와 신규 분양시장 침체를 근본적 해소할 수 있는 수요 확대, 거래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은 미흡하다고 할 것임.
  - 특히 도심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재건축 관련 규제도 절차 완화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의무비율이나 소형주택의무비율 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
- 9.1 대책은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실거주 조건 강화라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흘러 오히려 거래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9.19 대책은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세부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되어 있어 현실적인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 등에 120조원 내외,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향후 10년 간 10만 가구 공급시 10조 5,000억원 등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9.23 대책은 종부세 개선에 대해 정치권에서조차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고, 기형적인 조세제도로 생겨난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흡수통합하고,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음.

## ■ 정책 개선 방향

-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기존 발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i)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전매 허용(전매 차익은 적절하게 환수)
  - ii)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의 유예 기간 연장
  - iii) 각종 정책 및 세제의 적용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
- 경기 침체 지속과 전세계적 금융 위기 확산, 지속적인 금리 상승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재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주택 구입 능력 제고를 위하여 DTI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
- 신규 택지 공급이 곤란한 도심지 내의 민간 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규제인 소형임대의무비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수요와 공급 계획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세 부담의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부동산 경기의 침체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현행 2%에서 1%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 기존 규제 가운데 상호 중복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의미와 기능이 퇴색된 채권입찰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청약가점제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시장이 활황일 때는 적절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침체기에는 거래를 더욱 냉각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임.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 “건설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 시급하다”

– 연이은 세계 금융 위기로 건설업계 자금난 최악, 다각적 대책 마련 절실 –

### ■ 세계 금융 위기로 금융계 패닉 상태…기업들의 자금난 최악

- 미국발 금융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최대의 경제 위기에 직면
  - 주요국들은 그동안 단기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제금융을 단행한 데 이어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를 단행, 세계적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섬.
  - 미국은 이 달 8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의 2%에서 1.5%로 인하, 유럽중앙은행(ECB)도 4.25%에서 3.75%로 조정, 영국 잉글랜드은행도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은 4.5%로, 스웨덴 중앙은행도 같은 폭만큼 내린 4.25%로 결정, 중국도 기준금리·예금금리 27bp 인하
  - 주요국의 금리 인하 단행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증시와 환율이 동반 붕괴 현상을 나타내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 글로벌 신용 경색 심화로 시중의 통화·유동성 증가세가 3개월째 둔화세를 나타냄.
    - ※ 8월 중 광의통화(M2, 평잔)는 전월보다 증가율이 0.1%포인트 하락한 14.7%, 9월 M2 증가율도 14%대 중반 전망 금융기관 유동성(Lf, 평잔) 증가율도 11.8%, 3개월째 내림세
  - 역대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된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위기는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2008년 들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지수는 70선 이하로 하락.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체의 자금조달지수 상황이 매우 악화

### ■ 정부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 건설업 부문은 역부족

-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2009. 6)」을 통한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신규 유동성 공급 유도(각종 인센티브 부여)
- 「중기 Work Out의 원활한 추진」 중 「대주단 협약(2008. 4∼)」 등에 증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대주단 협약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신보에 ‘공사계약 체결∼공사대금 결제기간’ 간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 론 보증’ 도입 및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및 대체 유동성 공급 방안임.
- 이번 대책은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편임.
  -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은 금융기관들의 상시기업평가 시스템 구축의 선행이 요구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 따라서 시급한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
  - 「대주단 협약(2008. 4∼)」의 경우 참여기관이 확대되면서 실효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1년 정도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추후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브리지 론 보증’은 절실한 지원 방안임에는 틀림없으나,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사업 규모로 볼 때, 보증 한도 및 보증 규모가 미약한 수준임(보증 한도 확대(30억원→70억원), 보증 규모 2008년 2,000억원, 2009년 5,000억원).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및 대체 유동성 공급 방안은 일반 제조업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이므로 건설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 방안 검토가 요망됨.

#### ■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 매우 절실…다각적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 필요

- 유동성 공급은 건설기업의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이외에 주택 수요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투기지역 고가 주택에 대한 LTV 및 DTI 규제를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조정(6억원 → 9억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구매 능력이 있는 매수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음.
  - 공사 대금에 대한 ‘브릿지 론’ 보증의 보증 규모 확대와 건설 프로젝트 단위의 공사대금 매출 채권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신용공여방안 마련이 요구됨.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 “장기계속공사, 1건의 단일 계약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 차수별 계약은 계약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단순한 분할공급계약의 일종 -

- 정부는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2차 이후의 차수별 계약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권해석(2008. 6. 10)을 하여 건설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단순한 ‘예약’이 아니라 1건의 ‘본 계약’임.

- 정부는 장기계속공사의 최초 낙찰자 결정은 단순히 ‘계약의 예약’에 해당하고, 각 연차별로 체결되는 차수 계약은 ‘본 계약’으로서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이라고 유권 해석하였으나,
  - ‘예약’이란 장차 체결할지도 모르는 계약을 위하여 미리 상대방을 구속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입·낙찰과 계약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단순한 “예약”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음.
- 즉,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1건의 계약으로서, 본 계약의 성격이 있으며, 차수별 계약은 단지 이행 방법이 특수한 계약으로서, ‘분할공급계약’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모래 100톤의 매매에 있어 매월 10톤씩 10개월 동안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같이 매매 목적물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일정량의 물품(모래 100톤)이나, 이를 나누어서 각 분량(모래 10톤)을 각각 다른 시점에 공급하기로 할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약(매매)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이행 방법이 특수할 뿐임.
-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총 공사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2차년도 이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계약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어 연차별로 완공된 시설 부위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기산(起算)하려는 의도가 있음.
  - 즉, 연차별로 나누어진 각 연차별 공사계약은 공정별 또는 계약 목적물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상 제약으로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로 차수별 계약을 시행하는 것일 뿐, 「국가계약법」의 취지로 볼 때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는 성질이며, 따라서 단일공사로서 1건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입찰 과정에서도 총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고 계약하며, 연대보증인의 보증 의무도 차수별 계약이 아닌 전체 계약의 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찰보증금이나 계약 보증금도 차수별 계약 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 장기계속공사는 계약 이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 변경은 불가능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매년 연차적으로 공사를 체결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제2차 공사 계약부터 수의 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무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7년 7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이상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
-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이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즉, 계약자로서는 비록 차수별 계약을 맺더라도 총 공사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이상, 쌍무계약(雙務契約)의 원리상 발주자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정당업자”란 부실벌점이나 하자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거나 담합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월에서 2년 이하로 신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 바, 이미 본 계약이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서 2차년도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타당하지 않음.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 ■ 주요 정부 부처 회의 참석 현황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008. 10. 2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전망 TFT 회의</li> <li>■차관보 주제 각 연구기관 전망 담당자 회의 참석, 최근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논의</li> </ul>
2008. 10. 7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변경제도 관련 회의</li> <li>■본 연구원에서 제시한 대표 품목 선정에 의한 물가변동 반영 방안 설명 및 논의</li> </ul>
2008. 10. 8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직업능력표준(KSS)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li> <li>■건설 분야의 직무 체계 관련 논의</li> </ul>
2008. 10. 9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도 국가기술자격의 산업 현장 내 효용성 평가 자문회의 참석</li> <li>■건축 및 토목 분야 기술 자격 체계 관련 논의</li> </ul>

## ■ 주요 대외 활동 추진 현황

- 10. 7(화), ‘최근 주택·부동산 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10. 7(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최근 주택·부동산 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 주요 발표 내용
    - 최근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속한 관련 법령의 제, 개정과 시장 적용이 요구됨. 일련의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역행하거나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에 부정적 영향 소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최근 주택·부동산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첫째로 미분양 해소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수요의 정상화가 시급하며, 둘째로 건설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셋째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 및 완화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등의 필요성 제시
- 10. 9(목), 한국주택협회-베트남부동산협회 공동 회의 주제 발표
  - 「한국과 베트남 부동산 협력방안」 주제 발표
  - 주요 발표 내용
    - 베트남 정부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선 및 행정 지원 필요성 및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 취득의 용이성 확보 필요성 제기
    - 베트남 현지 업체와 국내 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와 베트남에 대한 ODA 역할 강화, 국내 업체의 적극적 사업 제안 활성화 제안

## 「토건국가론」을 넘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자원시장의 불안으로 물가는 크게 오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각국의 주가는 요동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감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서민용 주택 건설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기 대책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르고 승수효과가 큰 것이 공공 투자 정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감세나 이자율 정책 등은 실물 경제가 반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를 보기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반해 인프라 등에 대한 공공 투자는 국민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인프라가 1% 증가할 때 생산은 대략 0.2~0.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투입산출표에 의하면 인프라 투자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주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요즘 건설 투자만 나오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 토건 국가, 삽질 경제, SOC 마피아 등 저급 용어들이 난무한다. 200여만 명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반사회적인 일이라도 벌이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성숙한 사회에 어울리는 품위 있는 말이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크다.

인프라는 수명이 최소한 수십 년을 넘는다.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불일치도 크다. 그리고 투자 결정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불확실성도 크고, 이해 관계자도 많다. 아무리 정교한 분석 모델을 동원해도 최적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대 또는 과소 투자가 일어나기 쉽다. 과대 투자면 토건족의 비리요, 과소 투자면 무능과 나태의 결과라고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국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은 OECD 31개 국가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약 13%에 달할 정도로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투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은 편협하다. 건설 투자를 무조건 낡은 발상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는 투자를 넘어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